

# 주호영 리더십 흔들리나… ‘先예산처리 後국정조사’ 역제안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예산안 위해 한발 물러서  
민주당 원내대표 만남 가능성 시사  
친윤계 중심, ‘국조 수용 불가’ 입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29 참사 국정조사 참여를 요구하는 야당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이후 여야 합의로 하자’고 역제안했다. 국민의힘이 ‘경찰 조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 입장으로 정리했지만, 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한발 물러선 셈이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윤(親尹派)에서 국정조사 거부 입장을 명확히 했고,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한 가운데 주 원내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확실히 밝히면 국정조사 협의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중요 법안을 처리한 이후 10·29 참사 국정조사 협의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원회 회장으로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기간이 국정조사와 섞이는 것은 맞지 않고, 예산안 처리 후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할 길을 찾아보자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주 원내대표는 당시 김진표 의장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차원에서 위원 명단을 22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한 요구는 거절했다. 그러면서도 22일 기자들과 만난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협의에 응하게 되면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이 제출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에서 주 원내대표 역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협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나 국정조사 관련 논의 차원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만남 가능성도 열어뒀다. 양당 원내대표 회동 계획에 대해 “현재까지 잡힌 건 없다”고 말한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여러 채널을 통해 접촉하겠다”는 말도 했다.

문제는 내부 설득이다. 지난 21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는 ‘참사 관련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한다’로 당론이 모였다. 친윤계 중심으로 ‘국정조사 수용 불가’ 입장이 모인 뒤 당론까지 채택된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예산안 처리 협조를 위해 국정조사 참여 필요성 의견도 냈지만, 소수에 불과했다.

주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추진에 있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당내에서도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은 모습이다.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주 원내대표 제안은) 당의 전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 입장인 ‘선 수사 후 조사’) 입장을 바꾸려면 주 원내대표의 원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같은 날 오후 〈메트로경제〉와 통화에서 “주 원내대표가 말한 것은 아직 당 공식 입장은 아니다. 여전히 경찰 조사가 미흡하면 (그 때 가서)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의총에서 정한 것을 바꾸려면 소속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의원들을 주 원내대표가 설득하지 못하면, 민주당 입장이 바뀌어도 참사 관련 국정조사 추진은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주 원내대표도 이에 “민주당이 확실히 밝히면 의원들에게 뜻을 물어야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내부에서 조차 타협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 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품목 확대 불가

민주노총 화물연대 요구 일부 수용  
“사망사고 줄지 않아 평가 다시 해야”

국민의힘과 정부가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일몰) 삭제, 5가지 품목(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확대 조치 가운데 정부·여당이 일부 수용한 셈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여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김수상 국토 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화물자동차 운임제도는 화주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 의견이 첨예한 상황”이라며 “당정은 컨테이너, 시멘트에 한해 운임제도 일몰 연장을 확대하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대신 3년 연장으로 정한 데 대해 성 의장은 “안전운임제를 실시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사고율은 올라갔다. 사망사고가 줄지 않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3년 연장했고, 이 기간) 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추가 적용을 요구한 5가지 품목은 수용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서도 성 의장은 “이들 품목은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양호하고 적용 시 국민들의 물류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 38개국 가운데 정부가 운임을 정하고 처벌까지 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그만큼 화물연대에 대해, 차주들에 대해 국가가 보호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이 밖에 당정은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러나 총파업을 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응한 정부 차원의 비상운송수단 체계 운용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 대장동팀 폭로… 비명계, 당 대처 의문 솔솔

민주당 지도부, 강하게 반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이른바 ‘대장동팀’의 폭로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당의 대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비(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참여해 큰 수익을 얻은 대장동팀의 핵심 일원이었던 남욱 변호사는 전날(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천화동인 1호 일부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천화동인 1호는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 중 가장 많은 수익을 배당받은 곳이다.

또한 남 변호사는 2014년 경 이 대표 층에 4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당시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하던 때였다.

대장동팀의 다른 핵심 멤버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남 변호사까지 이 대표에 불리한 발언을 쏟아내자 민주당은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수법”이라고 반발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장동 일당의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오늘 재판에서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다. 삼인 성호(三人成虎)로 없는 호랑이를 만들 어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0억 클럽은 어디로 가고 대장동 일당들의 말바꾸기와 거짓주장을 난무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야당 파괴를 자행하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고령곤 4차장검사, 엄희준 반부패수사1부장, 김영철 반부패수사2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장은 모두 윤석열 사단”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민 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당시와 본청 사무실이 압수수색 당하는 등 당에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으로 위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로 부정부패 관련 혐의 기소시 당직자의 당직을 정지하는 조치가 있다”고 밝혔다.

## 尹 “韓기업 해외 경쟁력, 정부가 밀어줘야”

“재정·제도적 뒷받침 매우 중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동남아시아 순방을 비롯해 연쇄 회담에서 거둔 성과를 언급하며 “전쟁을 방불케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힘껏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가 모두 한마음으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네덜란드·스페인 정상과

의 연쇄회담을 통한 성과를 국무위원들과 공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 최초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프놈펜 성명’ 채택 ▲3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인도네시아와 투자·핵심 광물·디지털 등 10건의 MOU ▲사우디와 에너지·방산·인프라 건설·문화 등 20개 이상 투자 협력 MOU ▲한-스페인 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 협력 강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익과 민생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무위원도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박정의 기자 pathfinder@